

도-국회의원, 전기요금 인상 대책 공조

오 지사, 어제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현안정책 간담 송재호·김한규·위성곤 의원 참석 지역현안 등 논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농작물 한파 피해 대책 모색

오영훈 제주지사(왼쪽)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 지원과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대책 및 농작물 한파 피해 지원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5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민선8기 출범이후 4번째로 제주 지역 국회의원과 현안정책 간담회를 갖고 가스·유류비 인상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제 정세로 인한 난방비 급등과 농작물 한파 피해 등 제주가 당면한 각종 현안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동의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지사는 이날 국회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지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대책 ▷농작물 한파 피해 지원 ▷양식사업 비과세 한도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특히 주민자치권 회복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및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 농·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협력 등을 중점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특별자치도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 중이고 7단계 제도개선은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도정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방비·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1차산업 비중이 큰 제주에서는 민생경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한데 지혜를 내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한후 "분산에너지, 민간 우주산업 등 신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 "모두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은

들은 난방비 지원과 관련한 정부 추경 상황 등을 살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자는 뜻을 모았으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완료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앞서 이달초 제주자치도는 국제 정세로 인한 유류·가스비 상승 등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 27억3700만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지역 국회의원과의 현안정책 간담회

2023. 2. 5.(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삼다홀



오영훈 지사(왼쪽에서 세번째)가 5일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 앞서 김한규·송재호·위성곤 의원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알뜨르비행장 평화대공원 탄력받나

지역 20개 대표단체 추진위원회 구성·출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을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정읍 20개 대표단체는 지난 3

일 대정읍민관에서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정읍 20개 대표단체는 평화대

공원이 대정읍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적 함의를 가진 지속가능한 평화대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알뜨르·송악산 일대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제주도·제주도

의회와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알뜨르평화대공원 조성 공약 실천계획 수립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LPG도 가격인상 조짐... 4면 / 2023 계묘년 탐라국 입춘굿... 8면

지자체 간 '바다 경계' 명문화 예고

지난달 국회서(가칭) '해양경계 길잡이법' 발의 제주도, '해양경계법 제정 대응 실무위' 본격 가동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이 예고된 가운데, 제주도가 실무위원회를 꾸려 제주 바다 권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착수 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정부에서 '해양관할구역 설정안'을 마련하면 제주와 인근 지자체와의 해상 경계가 설정되는데, 이는 조업권 뿐 아니라 해상에서의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권 행사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타 지자체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 간 해상경계 설정 예고 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은(가칭) '해양경계 길잡이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식 명칭은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은 지자체 해상경계 설정 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단 지자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역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행정관할의 행사 내용을 조사해 반영하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할구역 설정 기본계획과 해양관할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는 해양관할구역설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제주바다 권역 최대한 확보"= 법률안에 따라 정부가 해양관할구역 설정안을 마련하면, 제주의 경우 향후 전라남도도 경상남도도 해상 경계가 정해지게 된다. 이는 향후 각종 조업권 뿐 아니라 해상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상 경계 설정이 곧 '바다 주권'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제주에서 불분명한 해양경계로 인한 타 지자체와의 분쟁 사례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제주-완도 제3연계선 해저케이블 건설 ▷제주-완도 조업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도는 해상 경계 설정 기준 법제화 예고에 따라 실무진으로 구성된 '해양경계법 제정 대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구성해 '제주도 해양경계 최적(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실무위는 제주 섬을 둘러싼 바다에서 제주도지사가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의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게 된다. 정부 계획에 따라 지자체 해상 경계가 설정될 경우, 제주바다 권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할 구역으로 설정한 대상 해역에 대해 행정 권한을 행사했던 내역을 조사하고, 해역의 이용·관리가 이뤄졌던 곳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실제 자료 조사도 수행한다. 실무위는 당장 이달부터 가동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제주) 바다에서 제주도가 행정 권한을 행사했던 사례 조사 등을 통해 해양경계 최적안을 수립할 논리 개발을 위해 실무 위주로 구성했다"라고 실무위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본사 사령

- ▷경영기획실장 김병준
- ▷논설위원실장 고대웅
- ▷논설위원 조상윤(선임기자 겸임) 2월 6일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138
잠정집계 5일 누적 38만1425
<7시 기준>

육지와 제주의 배송비는 똑같이!

'제주도'로 주문할 때는 추가배송비 부담없는 해남미소에서

해남군청 직영 땅끝해남 농수산물 종합쇼핑몰

해남미소

www.hnmiso.com
080-859-1100 무료

NAVER 해남미소
네이버에 해남미소를 검색하세요



땅끝해남, 한반도의 시작
해남군